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조승래의원 ·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43
----------	------

발의연월일 : 2024. 11. 18.

발 의 자 : 조승래 · 이인선 · 강선우
정을호 · 박성훈 · 김기웅
장동혁 · 이정문 · 우재준
박충권 · 박상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교통, 의료, 복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
에서부터 과학의 난제 해결 등 전문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인공지능
이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의 활용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강
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의 개
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윤리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다.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제품·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4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의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표준의 제정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

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인공지능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발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또는 그것을 시스템적으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6.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제작, 개발, 보급,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누구든지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공지능제품·인공지능서비스의 출시 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제4조(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관련된 법·제도 및 문화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방향 및 그에 따른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부문별 추진계획으로 본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공지능과 관련한 소관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인공지능정책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인공지능정책센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2.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 개발의 지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4.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확산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문화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분석

5. 인공지능윤리의 확산과 실현, 인공지능 및 알고리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순서적인 계산 또는 풀이 절차·방법을 구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교육·인식개선·홍보
 6.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개발·활용 과정에서 국민안전과 인권보호를 저해하는 위험 요인에 관한 조사·분석
 7.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동향 분석, 미래예측 및 법·제도의 조사·연구
 8. 다른 법령에서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업무로 정하거나 인공지능정책센터에 위탁한 사업
 9.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 ③ 진흥원이 아닌 자는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그 밖에 인공지능정책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절 인공지능산업 기반 조성

제6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동향·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
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 시험 및 평가
3. 개발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4. 인공지능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
5.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
6.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연구·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를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 및 해당 기술의 확산을 위한 사업
4.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5.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
·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

6.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이용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신체와
재산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
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
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
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제7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및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에 사용되는 데이터(데이
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하
며, 이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 한다), 인공지능 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
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 표준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제작, 생산, 수집,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
·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활성화

제9조(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게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창업의 활성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인공지능 융합의 촉진) 국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제도개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도의 연구,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관련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① 정부는 인공지능·인공지능기술의 개발, 인공지능사회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공동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4.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5.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
6.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유통 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7.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 파악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물리적·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 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수립·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지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통계 및 지표의 작성·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2. 제8조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 및 유통·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
3. 제8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관리
4.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0조(과태료) ①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공지능정책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